

제2장

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

Global Cold War and Northeast Asia

마상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내적조건

- 한국과 중국: 탈식민 독립의 과제
- 러시아혁명의 영향
- 유평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의 분기

외적조건

- 알타체제의 성립: 미소협력에 입각한 전후질서 구상
- 알타체제의 퇴색: 미소냉전의 대두



동북아 냉전의 구조

- 미국 중심의 hub-and-spokes 체제 형성
- 중소동맹의 성립과 분열

국제적 냉전이

종식된 지 25년 가량이 지났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잔존하면서 역내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 냉전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국제적 냉전의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영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이 지역의 냉전경험이 갖는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냉전 이전의 역사적 경험이 이 지역에서의 냉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제적 냉전과 동북아시아 지역냉전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동북아시아 냉전의 구조적 특징과 그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ld War ended almost 25 years ago, the Cold War does not completely end in Northeast Asia, making a peaceful regional order difficult to emerge. For this reason, attention to and research on the Cold War in this region holds current importance even toda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main features of the Cold War experience in Northeast Asia from three aspects. First, it analyzed how historical experiences before the Cold War affected the actual course of the Cold War in the region. Second, it explains the interplay between the international Cold War and the Northeast Asian Cold War. Third, it examines the distinctive Cold War structure in the region and the process of its construction.

KEY WORDS 공산주의 Communism, 냉전 Cold War, 미국의 일본점령 US occupation of Japan, 샌프란시스코 회의 San Francisco Conference, 얄타회담 Yalta Conference, 중국 공산화 communization of China, 중소분열 Sino-Soviet split, 한국전쟁 Korean War, 한반도 분단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허브앤 스포크 체제 hub-and-spokes system

I 서론

냉전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두 나라는 전후 세계질서를 이끌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일원으로 독일의 나치즘에 맞서 함께 싸웠으나, 전쟁 종료 이후 차츰 상호경쟁 및 대립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대립은 이념, 군사 및 경제의 차원을 모두 포함했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냉전의 본래의 그리고 주된 무대는 유럽이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유럽 문명에 뿌리를 둔 국가로서 유럽은 그들이 인식하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냉전의 전개는 비단 유럽에 국한되지 않았다. 냉전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20세기 후반 세계 각 지역에서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냉전을 단지 미소대립의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Westad 2007). 미국과 소련이 명시적으로 원했거나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했다. 이 글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경험이 갖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매우 익숙하지만 국제적으로 보편적이지는 않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중국 중심의 천하(天下)질서에 속해있었으나, 천하질서는 지리적으로 비단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천하는 오히려 중국이 관념하는 세계 그 자체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중국의

천하라는 관념이 현실에서 깨지자, 일본의 '동양(東洋)' 내지 '동아(東亞)'가 빈자리를 채우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본제국의 패망과 함께 현실을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동력을 상실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 이후 유럽 중심의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으나 20세기 초의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세계정치의 주변부에 놓여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정치의 전개에 보다 가깝게 연동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1936년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1941년 미국을 군사 공격함으로써 동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장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이 영국제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소련을 공격하여 이들의 전력을 분산함으로써 유럽전선에서의 독일을 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헨 2003, 33-34).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소련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참여했다. 이후 동아시아 전쟁의 경과로 인해 전후 미국과 소련은, 스스로의 의도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시작된 냉전의 맥락에서도 동북아시아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지역 단위가 아니었다. 냉전기 미국 대외전략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북아시아는 동아시아의 일부이고, 동아시아는 또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의 부분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아우르는 소련 및 공산주의와의 대결의 전체적 맥락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일본과 중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1950년에는 한국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경우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적었다.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유럽 국가들의 영향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관심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었다(Cohen 2000, 270).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국제적 냉전의 핵심지역으로 등장하였고,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Buzan and Waever 2003, 130-133).

이 글은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국제적 냉전의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냉전에 대한 원론적인 역사 연구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대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냉전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냉전 이전의 역사적 경험이 이 지역에서의 냉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국제적 냉전과 동북아시아 지역냉전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동북아시아 냉전의 구조적 특징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토를 거쳐 결론에서 동북아시아 냉전의 타 지역에서의 냉전과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동북아시아 냉전의 역사적 조건: 냉전 이전의 냉전

냉전은 상이한 정치이데올로기의 갈등이 군사적 차원 및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냉전 국제질서의 핵심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대표하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놓여 있다.

이 점은 냉전의 기원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미소의 직접적 대립이 나타나고 전면화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일이지만 그러한 대립의 씨앗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제정이 종식되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뿌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냉전의 시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냉전이라는 현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빨라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은, 이 지역에서 냉전이 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던 데에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컸다. 그러한 영향은 단지 사상 체계 또는 정치체제로서 공산주의가 갖는 매력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혁명을 통해 타민족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부강하고 근대화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된 더 중요한 이유였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중화질서 또는 천하질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으며, 이후 중국은 사실상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고 이듬해 청 왕조가 붕괴하며 공화정이 수립되었지만 중국의 혼란은 그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의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袁世凱)는 황제처럼 행세하며 혁명파들을 탄압했고, 1916년 그가 사망한 후에는 지방의 군벌들이 할거하는 군벌시대(1916-28)가 펼쳐졌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도 서구 열강들의 경

제적 침탈은 계속되었으며, 중국의 장래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고민도 깊어 갔다. 이들은 서양의 정치제도와 정치사상을 공부하면서 중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중국의 독립과 근대화의 방법을 고민하였다.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쑨원(孫文)은 소련의 조직과 효율성을 배워 반(反)제국주의 및 반(反)봉건주의 운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배치되지 않고 공존하며 중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첸두슈(陳獨秀), 리다자오(李大釗) 등의 지식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레닌이 주도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소비에트 국가건설에서 중국의 미래를 찾았다. 이들에 의해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다. 사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이에 따른 붕괴를 예언한 마르크스주의 자체보다는 전위조직을 통해 혁명을 이끌고 소련연방을 건설한 레닌주의에 보다 깊은 감화를 받았다(Westad 2012, 285-286).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결성을 위한 자금과 조직의 노하우를 제공했다. 그러나 소련은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혁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 아래 쑨원이 1919년 결성한 국민당과 그의 민족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힘을 더 쏟았다. 소련의 지시에 따라 중국 공산주의자들도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하여 국민당 내 좌파와 연계를 시도했다. 국민당은 소련의 지도와 지원 아래 조직과 군사력을 키웠으며, 1925년 3월 쑨원이 사망할 당시에 중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이 되어 있었다(Westad 2012, 155-160).

쑨원 사후, 국민당 내에서 우파의 장제스(蔣介石)가 좌파 왕징웨이(汪精衛)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국민당의 권력을 획득했다. 그는 1926년 공산당과 함께 북벌을 시작하여 군벌을 타도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공산당과의 합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제스는 외세를 몰아내고 중국이 실질적 독립을 쟁취한 이후 좌파와 공산당이 중국을 소련의 통제하에 두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하여 그는 1927년 4월 상하이로 시작으로 대대적인 공산당 및 좌파세력 소탕작전에 나섰다. 1928년 6월 마침내 국민당은 베이징을 탈환하며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난징(南京)에 중앙정부를 세웠다.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하였다.

국민당 공세 하에 중국 공산당과 좌파세력은 힘을 크게 잃었다. 1934년 국민당 정부군의 공세로 공산당은 장정(長征)이라 이름 붙여진 긴 후퇴의 여정에 나서야 했다. 공산당원의 수는 4만여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버텼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절멸의 위기를 모면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중국 국공내전이 재개되었는데, 초기의 상황은 국민당에 크게 유리했다.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소련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국민당 정부는 소련과 우호조약을 체결했는데, 소련은 만주를 중국 국민당 정부에 넘기는 대신 경제적 군사적 양보를 얻었다(Westad 2012, 288).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냈다. 1946년 봄 소련군은 만주에서 철수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무장을 제공했고, 이후로 지

원을 차츰 늘려갔다. 중국 공산당은 만주에 대한 국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1948년 말부터는 공세에 나섰다. 베이징, 난징, 상하이, 광저우가 차례로 공산당의 수중에 넘어왔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중국의 공산화가 냉전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중국이 봉건주의와 제국주의를 척결하고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이 민족주의 우파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분기로 나타났고, 이 두 세력의 대립이 동북아시아 냉전의 주요한 특징을 보여 주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은 반봉건·반제국주의 또는 탈식민과 독립이라는 저항 민족주의의 과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냉전의 씨앗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또는 그 관련하에서 도입되었다(스칼라피노, 이정식 2015, 70-153). 사회주의 사상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한인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에게 널리 유포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컸다. 초기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의 모범답안을 러시아 혁명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좌파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들이었다”(신복룡 2001, 294).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 한인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였다. 코민테른의 지도에 따라 공산주의 계통의 독

립운동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의 노선 분리는 장차 한반도에 서의 이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경우도 냉전의 내적 조건은 미소냉전이라는 외적 조건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이전에 마련되어 있었다.

III 동북아시아 냉전의 외적 조건: ‘알타체제’의 성립과 변용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향해가던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흑해 연안 휴양도시인 알타에서 연합군 수뇌회담이 열렸다. 이 역사적 회담에는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그리고 회담의 호스트인 소련 공산당의 스탈린(Joseph Stalin) 서기장이 참석했다. 연합국 수뇌들은 독일과 추축국의 패색이 짙어가던 당시 상황에서 유럽 전후질서의 건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일본과의 전쟁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소련의 참전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쟁 참전을 요청하였고, 소련은 독일의 항복과 유럽에서의 전쟁 종료 2-3개월 이내에 만주로 진공하여 연합국의 편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2월 11일 조인된 알타 비밀의정서는 소련의 참전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 다롄(大連)의 무역항은 국제 관리하에 두고 이곳에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은 보장되며, 소련은 해군기지로서의 뤼순(旅順) 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다롄으로 통하는 중동 철도와 남만주 철도는 중소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며 중국은 주권을 유지한다. ... 외몽골과 위에 언급한 항구 및 철도 문제에는 장제스 총통의 동의가 필요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 원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세나라의 지도자들은 일본 패망 후 위와 같은 소련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 소련은, 중국과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서 중국을 일본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다(베스타 2014, 294).

알타회담이 보여 주듯이, 미국과 소련은 전후질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상호이해를 이루었다.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하면서 전후질서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었다.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 유럽은 크게 파괴되었고 유럽의 전통적 열강들은 더 이상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세계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알타회담에 영국의 처칠수상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회담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루즈벨트와 스탈린이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함께 독일에 맞서 싸웠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 이후에도 협조를 계속하며 국제질서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이후 도래한 미소냉전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대단히

순진무구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소협력이 지속되고 있던 가운데 그러한 비전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다.

미소협조에 입각한 전후질서라는 생각은 주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미국에 비해 힘의 열세에 놓여 있던 소련의 스탈린이 마지못해 동의함으로써 가능했다. 물론 루즈벨트가 그리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비전과 스탈린이 추구하던 세계혁명의 비전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로 충돌했다. 그러나 두 지도자는 그러한 충돌이 바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상호배타적인 영향권을 확보하고자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상호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 갖는 미국과 소련의 이익이 부차적이었던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양국 모두의 최우선적 관심지역은 유럽이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였지만 그것은 전폭적이기보다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다. 오히려 소련은 1945년 8월 14일 공산당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국민당과 우호동맹조약을 맺었다. 이는 위에 인용한 알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미소 간의 비밀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소련은 중국 특히 만주지역에서 이념보다는 실리에 따라 행동했다. 또한 소련은 중국 공산당에게도 국민당과 합작하여 일본과의 전쟁에 나서도록 지도하였다. 이는 일본의 팽창 저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소련의 인식, 그리고 중국에서 국민당이 우월한 세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산당의 즉각적

인 정치적 성공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련의 주관심사가 유럽이었고, 동아시아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었다는 데에도 기인했다. 소련이 중국을, 또 동북아시아를 즉시 공산화시켜야 한다고 급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련은 동아시아에서 “가급적 미국 등 다른 연합국에 협조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보장받는다”는 수세적인 자세를 취했다”(김성보 2011, 244). 소련의 이러한 태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대일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하기 않았다. 소련은 중국이 국민당에 의해 통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도 국민당을 지원했지만 역시나 전폭적인 지원은 아니었다. 미국은 마셜(George Marshall)을 중국에 파견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타협을 유도하고자 했다. 물론 미국의 의도는 국민당이 정치적 우위를 지키면서 공산당도 포섭하는 형태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소련의 정책은 양국이 상호협조하면서 전후질서를 이끌어간다는 정신, 즉 알타회담의 정신에 대체로 충실했다.

알타정신은 한반도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미국은 1942년 2월경부터 종전 이후에 한국에 대해 연합군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 이후로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 역시 알타정신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다. 대일전쟁의 조

기 종결을 위한 극단적 조치였다. 일본은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했다. 같은 날 미국은 소련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점령을 제안했으며, 다음 날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한반도의 잠정적인 분단이 결정되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항복 직후 당장 한반도에 진주시킬 만한 병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반도를 두고만 볼 수도 없었다. 소련은 알타협약에 따라 8월 9일 만주로 진공하여 대일전쟁을 개시했고, 며칠 내에 쉽게 한반도까지 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단독으로 점령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신탁통치 구상은 폐기되어야만 했다. 미국이 소련에 대해 한반도 분할점령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였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분할점령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까 내심 우려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소련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소련의 입장에서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핵심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이해는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소련을 위협할 가능성이라는 각도에서 정의되었다. 즉, 소련에게 한반도는 그 자체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보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부차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최우선적 관심은 일본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미국과의 협력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1945년 6월 28일 확정하여 극동사령부에 하달한 대일전 전략구상은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 전략구상은 일본의 관동군을 동서에서 협공하

고, 동시에 북동에서 공격함으로써 만주 중앙부에서 일본군을 포위하여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대일전쟁 구상에는 한반도로 진공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작전계획상의 목표는 오로지 강력한 재만 관동군을 분쇄하는 데 있었으며 한반도에 대한 작전은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보조적인 작전에 지나지 않았다”(전현수 2014, 70).

중국이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보여 주듯이 미국은 전후질서를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소련과의 협조를 중요시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국과 협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자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소련이 지녔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본세력의 제거였으며, 아울러 소련에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Stueck 2002, 31).

그러나 알타정신은 점차 퇴색해갔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대전의 종결을 목전에 둔 1945년 4월에 사망하고 트루먼(Harry S. Truman)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미소협조에 근거해 전후 세계질서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했던 루즈벨트식 국제주의도 점차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소련이 동유럽 군사점령 지역을 공산화하고 있다는 서방의 우려는 1946년 3월 처칠 전 영국수상이 트루먼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미국 미주리주 풀턴(Fulton)시를 방문하여 행한 연설에서 잘 나타났다. 소련이 “발트(Baltic)해의 슈테틴(Stettin)에서 아드리아(Adriatic)해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치고 있다”는 것이었다(Churchill 1946). 같은 무렵인 2월 22일, 주소련 미국대사관의 차석으로 근무하던 케년(George Kennan)은 워싱턴으로 ‘긴 전문

(long telegram)'을 타전하여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해 경고하면서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을 주문했다.¹ 이듬해 3월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연설을 통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면서 이를 사실상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정의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점차적으로 미국과 소련은 냉전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점차 '냉전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분단이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냉전적' 분위기는 실제 냉전으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미소냉전의 태동이 동북아시아의 지역사정과 긴밀히 함께 맞물리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은 미국과 소련, 그리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 자체를 극적으로 격화시켰다.

IV 동북아시아 냉전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결합: '냉전적 분위기'에서 냉전으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시 연합군 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소련과의 협조에 의거해서 전후질서를 건설한다는

1 원문은 Kennan 1946 참조.

구상을 세웠고, 이러한 구상은 종전 직후 어느 정도 실제 정책으로도 옮겨졌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종전 직후부터 그 예외가 나타났다. 바로 일본점령의 문제였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 이후 일본열도를 단독으로 점령했다. 소련은 유럽에서 연합군 4개국이 공동으로 독일을 점령하였듯이 일본에 대해서도 공동점령을 희망했고 이를 미국에 요구했다. 영국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형식적으로 연합군 협의를 거치는 모양만 취했다(Schaller 1985, 57-65).

미국이 일본의 단독점령을 결정한 근본적 이유는 일본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Cumings 2014). 1854년 개항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여겨졌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해양세력으로서의 미국에게 일본열도는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갖는 곳이었다. 게다가 전술한대로 루즈벨트의 사망 직후 미국에서는 소련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말과 8월 초 독일의 포츠담에서 다시 열린 연합군 전시회담에서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의 개발 사실을 넌지시 알렸다. 그리고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비밀리에 진행되어오던 원폭개발이 마무리에 다다르면서 소련을 대일전쟁에 참여시키려던 미국의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반대로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원폭개발이 자신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련은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던 날인 8월 9일 대일전쟁에 참여하였다.

미국의 일본 단독점령이 냉전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

은 아니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한반도에서 소극적으로나마 소련과의 협조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도 군국주의의 기반을 불식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아직 대소반공전략이 최우선적 목표이자 기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국공내전의 전개는 알타합의의 기반을 흔들기 시작했다. 알타합의는 국민당 정부의 지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중국 내부정세는 이러한 전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였으나 국민당의 부패와 민심이반으로 인해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 낙담했다. 1949년 10월 공산당의 내전 승리로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대만으로 패퇴한 국민당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당의 약화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화는 미국에게 충격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소련의 위협을 막는 보루가 되기를 희망했는데 그러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Hunt 2005, 257).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특히 일본 점령정책에 변화를 초래했다. 더불어 일본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소위 ‘역코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에 있어서 전환이 나타났다. 좌익세력의 약화 그리고 신속한 전후복구가 탈군국주의화와 민주화보다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등장한 것이다.

알타체제의 붕괴와 냉전의 본격화에 더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반도 분단의 심화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이었다. 전술하였듯이 종전 후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미 연합군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즉 연합군의 일원인 미국, 영

국, 소련 및 중국의 4개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에 참여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단독 점령한 이후 소련은 한반도를 4개국이 나누어 신탁통치하는 데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의 자신의 발언권이 1/4로 제한될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미국의 거듭되는 요청 끝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회의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은 5년간의 4개국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이어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선(先)임시정부 수립, 후(後)후견”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완범 2007, 51). 미국의 양보로 12월 28일 발표된 의정서에는 소련의 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은 첫째 단계로 공동위원회(이하 공위)를 구성하여 한국의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4개국 신탁통치방안을 작성하며, 둘째, 이를 4개국 정부가 공동심의한 후, 셋째, 최종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방안을 결정하기로 되었다(이완범 2007, 56, 161-162). 이로써 신탁통치에 대한 그간의 미소합의는 외양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 국내정치세력을 끌어들이자신에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기도하였다. 또한 소련은 미국과 함께 한국 문제처리에 대한 영향력을 반분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전현수 2014, 77-78).

1946년 3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 민족주의 정치세력들은 신탁통치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소련이 반탁세력을 협의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공위는 처음부터 난항에 빠졌다. 공위는 5월 6일부터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1947년 6월에 미소공위가 재개되었으나 미소협조하에 한반도 통일정부를 수립하기에는 대내외적 조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다. 같은 해 3월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이 상징하듯이 이제 미소는 서로를 협조의 대상보다는 적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통일을 위한 정치적 조율은 점차 어려워졌다. 미국은 남한에서 중도파를 지원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통일을 모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소련의 지원하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고 8월 북조선로동당이 세워졌으며,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수립되었다(와다 2014, 57-69).

1947년 9월 미국이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결정했고, 10월에 미소공위가 최종 결렬되었다. 11월 유엔총회를 통해 한국에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실시가 결의되었으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북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언되었고, 이로써 남북한 분단이 확정되었다. 한국의 신탁통치 후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알타체제는 미국의 일본 단독점령, 중국 공산화에 이어 또 다른 타격을 입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무력에 의한 통일 기도였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인위적 분단

의 연장선상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무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은 남한의 이승만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북 간의 결정적 차이는 외부의 지원 여부였다. 미국은 이승만의 무력통일 시도 가능성을 우려하고 위협시했다. 반면 소련은 김일성이 1950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전쟁지원을 요청했을 때 이를 승인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같은 요청을 했으나, 이때 스탈린은 한국에서의 전쟁이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여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 년 뒤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중국의 동의를 전제로 전쟁지원을 약속했다. 5월에 김일성이 전쟁계획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미국의 참전을 우려했지만 이미 스탈린의 승낙을 얻어온 사안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조약을 막 체결한 상태였고, 소련의 지원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긴요했다(Jager 2013, 62).

스탈린의 예상과 달리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남침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즉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단지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과 공산주의의 세계적 팽창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대응했던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해 점증해 오던 의구심은 이제 한국전쟁으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일주일 이내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제24사단 병력 일부를 한국에 파견했고, 이후 유엔을 통

해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조직하여 파병하였다.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북한군의 일방적 진격이 저지되었고,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오히려 전세의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다. 북한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압록강 부근까지 북진했다.

절멸의 위기에 놓인 김일성의 구원 요청에 따라 10월 초 스탈린은 중국의 참전을 촉구했다. 마오쩌둥은 고민했다. 참전은 곧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한 상태였다. 미국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다면 중국의 안보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Jager 2013, 121-122). 10월 중국 ‘인민의용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또다시 극적으로 바뀌었다. 1951년 이후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전선의 교착상태가 이루어지면서 밀고 밀리는 소모적 전투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다.²

한국전쟁은 냉전시기에 발생한 최초의 열전이었으며, 이로 인해 냉전은 크게 격화되었다. 물론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간의 직접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쟁의 지리적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전쟁은 제한전(limited war)이었다. 하지

2 위더스비(Weathersby 2014)의 연구에 따르면 1953년 4월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휴전의 모색이 가능해졌다. 스탈린은 미국을 동아시아에 묶어놓고 유럽을 비롯한 보다 큰 관심지역에서의 소련의 이익을 확대해가고자 한국전쟁을 지속시켰다고 보았다.

만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적피해와 야만적 살육의 경험은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광기를 증명했다. 민간인 사상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 역시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대결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데올로기가 주입한 휘발성으로 말미암아 냉전의 군사적 대립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한국전쟁은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데올로기적 적대의식이 증대되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한국전쟁으로 미소 양진영의 대결이 언제든 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실로 증명되자 미국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이전에 검토되던 전면적 대소봉쇄 정책을 실제화하기 시작했고, 냉전을 위한 본격적인 군사안보 체제를 대내적으로 또 세계적 차원에서 구축해가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의 냉전은 여타 지역에 비해 강한 이념적 적대감과 함께 높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즉, 냉전기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는 대내적 안보(internal security)뿐 아니라 참여한 군사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분단과 적대적인 두 정치체제의 대립이 초래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은 냉전의 맥락에서 비단 한국과 중국만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남았다.

한편,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중국의 동북아 지역 국제정치에서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국제정치, 그리고 공산주의 블록 내에서의 중국

의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북한이 절멸의 위기 상황을 중국의 참전 덕분에 모면한 만큼 이후 전쟁은 향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피를 나눈' 혈맹으로 엮어놓는 역할을 했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악화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이 제2의 유고슬라비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련에 대한 중국의 환멸을 촉진하고자 했다.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소위 썬더볼트 전략이었다(Feet 1995, 86).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더 이상 이러한 가능성은 모색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혁명국가로 떠올랐다. 1972년 닉슨의 방중으로 미중관계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양국의 적대관계는 계속되었다.

V 동북아시아 냉전의 구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국제질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미국은 1949년 4월 유럽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안보동맹의 형성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했다. 1949년 필리핀 정부가 태평양동맹(Pacific Pact) 구상을 제시하자 대만의 장개석 총통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지키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했다(Calder and Ye 2010, 62-6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과 같은 핵심 정책결정자들

은 필리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과 대만이 다자적 동맹기구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얻어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었다. 이승만과 장개석이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여기에 미국이 연루될 위험을 경계했던 것이다(Cha 2009/10, 179-180).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구체화되어 갔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미국은 서둘러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질서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과의 군사적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난 마당에 어떻게 그러한 대립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가라는 전략적 질문에 시급히 답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Calder and Ye 2010, 67). 물론 이전부터 냉전의 기본 요소들은 나타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이전부터 분명했다. 그러나 냉전이 뚜렷한 윤곽을 갖춰가는 상황하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반공을 위한 구조를 갖추려는 미국의 노력은 새로운 것이었다.

미국은 먼저 1951년 일본과의 양자동맹조약을 시작으로 53년 한국, 그리고 54년 대만과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미국은 필리핀, 태국, 호주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양자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미국의 동맹체제는 자전거 바퀴의 중심과 바퀴살과 같은 모양이라 해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 체제라고 불리게 되었다. 처음 이 말을 쓴 사람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으로서 그 자신이 이러

한 시스템의 설계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국중심의 양자동맹 체제하에서 모든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으로 연결되었으나 다른 국가들 간에는 그러한 연결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국중심의 양자동맹체제는 동아시아에서의 뿌리 깊은 일본중시 태도의 산물이었다(Cumings 2014).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로 냉전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에 대한 군사점령의 조기 종료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로 남도록 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주권을 조속히 회복시킴으로써 군사점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전후복구를 촉진하고 경제적 부흥을 진작시킨다는 목표가 보다 중요하게 등장했다. 일본의 탈군국주의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삼았던 종전 직후의 점령정책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였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동맹체제는 또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평화 회의를 통해 양자동맹체제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미국의 주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전후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은 일본을 전쟁 책임으로부터 분리하고 향후 일본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제정치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이 회의에 초청되었고 이들에 대한 일정한 규모의 배상이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배상의 규모는 결코 큰 것이 아니었다. 회의의 결정은 일본에 대해 매우 너그러운데, 일본의 경제적 복구와 부흥을 신속히 이루고자하는 미국의 의중이 담긴 덕분이었다(Guthrie-

Shimizu 2010, 251-254).

전후처리를 위한 평화회의로서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참가국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가장 큰 희생을 입었던 한국과 중국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한국은 회의 참가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병합되어 있어서 주권을 지닌 국가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참가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이원덕 1996, 26-38).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요구였다. 미국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여타 국가들의 배상요구가 이어져 일본의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미국과 교전 중이었던 중국은 물론 대만도 회의에 초대되지 않고 배제되었다. 한편 소련은 회의에 참가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조약의 내용에 반대했다. 이렇듯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불완전한 전후처리의 사례로서 평화조약으로서의 성격도 크게 퇴색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함께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동맹관계를 맺었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군사동맹을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고 대신 경제회복과 부흥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특수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도약을 시작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고속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을 사실상 자신의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지정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너그러운 정책은 일본이 과거청산

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믿을 수 없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즉 일본이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청산을 회피하게 되면서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역사문제가 냉전이라는 새로운 질서 하에서도 잠복하였을 뿐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Buzan and Waever 2003, 132). 주지하듯 이는 지금까지도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주의 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대만과도 각각 양자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반공봉쇄 전략을 위한 동맹체제를 완성했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 및 대만의 양자동맹 체결을 역사적 필연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우연적 요인의 작동도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미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대만으로 패퇴한 국민당 정부에 대해 더 이상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 이후에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미국은 군사동맹을 통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없었다. 대신 미국은 경제지원을 통해 한국의 개발과 자립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은 1950년 1월 애치슨 국무장관의 유명한 내셔널프레스클럽연설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섰고, 이후 정전을 모색하면서 또다시 한반도에서의 안보체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여전히 미국은 한국과의 전면적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문제에 대한 해결

책은 필요했다.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주장도 미국을 불안하게 했다. 한국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마침 한국은 미국에 대해 군사동맹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북한 및 공산주의 세력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동시에 한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했다. 미국은 같은 이유에서 대만의 동맹도 체결했다. 동맹관계 수립이 본토회복을 노리는 국민당 정부의 성급한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했던 것이다(Cha 2009/10; Kim 2001).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촉진되고 완성되었다면, 냉전의 다른 한편인 공산진영 내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동맹 체결과 분열이 동북아 냉전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이지만 중소관계가 가져오는 파장은 국제 냉전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이지만 중국의 선택은 지역 수준을 뛰어넘는 국제적 차원의 파급력을 가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냉전에는 중국이 지역강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특징이 존재했다.

중국은 소련과 1950년 2월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1949년 10월 1일 공산정권의 수립을 선포한 지 불과 9주 뒤에 마오쩌둥은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다. 중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절실함에 비해 스탈린은 무관심했다. 그는 오히려 1945년 국민당 정부와 맺은 우호동맹조

약의 틀 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가고자 했으며, 마오쩌둥을 선뜻 만나 주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중소관계가 결코 평등하지 않음을 절감했고, 그의 민족주의적 자긍심은 크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마오는 2개월이나 기다린 끝에 스탈린을 만나서 그가 원하던 동맹조약을 맺을 수 있었다. 스탈린이 마음을 바꾼 것은 중국을 방치할 경우 중국이 혹시라도 서방에 가까운 방향으로 경사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Jager 2013, 59). 소련은 조약을 통해 중국을 일본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군사 및 경제 원조의 제공도 약속했다. 중국에게 소련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유일한 모델이었다(Westad 2012, 292-293; Niu 2010).

그러나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중소관계는 서서히 악화되었다. 소련에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대외적으로 서방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이 추진되자 중국은 이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높아진 공산권 내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중국은 대외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고, 1954년과 1958년에는 각각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금문도(金門島)와 마조도(馬祖島)에 포격을 가하여 대만해협 위기를 일으켰다. 중국은 또 대내적으로는 1958년 대약진운동 그리고 1965년 문화대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꾀하였다. 중국의 이와 같은 대내외적 행동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팽창을 지원하는 주된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마상운 2007, 80).

악화되어 가던 중소관계는 1950년대 말 이후부터는 그 분열

상을 점차 외부로까지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62년 4월에 작성된 미국의 정보보고서는 중소분열에 대해 분석하면서 “공산진영 내에 단일체적 단합과 통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Foot 1995, 132). 늦어도 1966년 이후 미국은 중소관계의 악화가 군사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자신의 정예 병력을 동유럽에서 중소국경지대로 이동시켰으며,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 가능성을 미국에 알리며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1969년에는 실제로 중소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력분쟁이 발생했다.

미국이 중소갈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자세를 취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소분열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중국을 위협한 혁명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1969년 출범한 닉슨(Richard M. Nixon)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소련으로부터 심각한 안보위험을 느끼고 있던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였다. 1971년 키신저(Henry A. Kissinger) 국가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닉슨 행정부의 미중관계 개선 노력이 양국관계의 정상화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중 국교수립은 1979년 1월 1일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초반 데탕트 국면에서의 미중관계 개선은 동아시아 냉전의 성격을 크게 바뀌놓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혁명을 수출하려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1978년 이후 미국과의 관

계개선이라는 바탕에서 서서히 서방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개혁개방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89년 동유럽의 민주화 혁명 그리고 1991년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독재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일찌감치 도입하기 시작한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소갈등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드러난 공산진영의 자기분열은 동아시아 지역의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북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 후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중소 간 이념논쟁이 불거지자 북한은 소련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보다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 중 어느 한 쪽으로만 기울 수는 없었으며, 이러한 태도가 문화혁명의 와중에 있던 중국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이다. 대립하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한은 외교적인 줄타기를 시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을 발전시키며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생성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특성은 북한이 중국과의 전혀 다른 이유에서 탈냉전의 흐름을 비껴가며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있는 비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 이전에 이미 중소갈등의 와중에서 혼자서기의 방법을 체득해 왔던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탈냉전 이후의 한층 심화된 대외적 고립과 대내적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홀로 생존을 도모해 오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냉전은 전후 유럽에서의 미소대립에서 기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미국과 소련 두 나라 모두에게 유럽은 자국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비해 동북아시아는 처음부터 냉전의 주된 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비롯한 미소냉전은 곧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냉전의 동북아시아로의 공간적 확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냉전의 영향이 동북아시아 자체의 요인과 함께 맞물려 갔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미소냉전이 동북아시아 냉전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였다기보다는 유럽 냉전과 동북아 냉전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 냉전이 확대되고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은 미소대립의 지리적 확대와 함께 본격화되었지만, 이 지역의 역사에서 배태된 내적 조건, 즉 전(前)역사도 지역 냉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동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식민지와 반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의 독립을 찾고자 노력하는 세력이 우파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분화하였다. 동북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은 그 태동에 있어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컸고, 이후 직간접적으로 소련의 지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과 운동의 태동 및 작동은 자생적 성격이 강했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분화와 대립이라는 동북아시아의 내적 조건은 1946-47년 이후 미소냉전대립의 등장이라는 외적 조건과 결합하면서 동북아시아 냉전을 주도해 갔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보듯이 본래 미국과 소련은 상호협조하면서 전후질서

를 이끌어 간다는 합의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러한 합의는 점차 상호의심과 대립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미소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계기는 중국의 공산화였으며 그보다 결정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은 비단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격화되었다. 냉전의 전선은 확대되었고, 이념적 대립이 군사적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냉전의 긴장도는 고조되었다. 아울러 냉전 당사자들의 이념적 경직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대외적 안보뿐 아니라 대내적 안보에 대한 우려도 증대시켜 안보를 이유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희생되는 토양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국이나 대만의 '안보독재'라는 정치적 경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냉전의 본격화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냉전질서의 구조도 모습을 갖추었다. 미국은 일본을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꾀하고 일본의 친미적 자세를 유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전후배상을 최소화하려는 가운데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전후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주의 안보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다자주의적 안보라는 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양자동맹을 맺음으로써 허브 앤 스포크 체제라고 불리는 미국중심의 양자동맹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체제는 오늘날까지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기본적 안보 전략 프레임으로 남아 있다.

한국전쟁 이후 공산권 내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분열과 대립이 동북아시아 냉전의 주요한 구조적 변인으로 작동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에서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공모와 협조는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 이후 중소관계의 균열이 점차 심화·확대되어 1960년대 말이 되면 양국 간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고, 중소가 서로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공산권의 균열은 국제 냉전의 구조와 성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소의 균열은 미중관계 개선의 배경을 제공했고, 중국은 서방세계와 접촉면을 갖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의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소갈등과 분쟁은 동북아시아 냉전의 경로에 큰 변인으로 작용했던 바, 북한의 경우 중소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를 취하며, 대내적으로 주체노선을 개발해 왔다. 북한이 경험한 이와 같은 역사적 경로는 탈냉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날까지 생존을 도모해오고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냉전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중국이 겪었고 기억하는 냉전의 모습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경험한 냉전에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미국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개발독재 등의 내용이 부각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미국에 대항하여 공산주의를 지킨 '항미원조'의 기억, 사회주의 혁명 완수의 기치 하에 이루어진 급진적 정치운동과 관련된 기억 등이 중요한

게 남아 있는 듯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발 떨어져 있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방적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된다. 오히려 일본의 기억에 있어서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과 대조를 이루면서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보다는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는 긍정적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냉전기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는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 위에 서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아직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빠른 부상으로 미중 그리고 중일 간 세력균형에 있어서의 긴장을 낳고 있다. 국제적 차원의 냉전은 이미 25여년 전에 종료되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잔존하면서 역내의 평화로운 질서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성보. 2011. 『북한의 역사 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서울: 역사비평사.
- 마상윤. 2007. “국제냉전질서와 한국의 분단.” 하영선, 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 베스타, 오드 아르네 저·문명기 역. 2014. 『잠 못 이루는 제국: 1750년 이후의 중국과 세계』. 서울: 까치.
- 로버트 스칼라피노, 이정식 저·한홍구 역. 2015.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 신복룡. 2001. “한국 공산주의자의 발생.”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울아카데미.
- 와다 하루끼 저·남기정 역. 2014. 『와다 하루끼의 북한현대사』. 서울: 창비.
- 이완범. 2007. 『한국해방 3년사, 1945-1948』. 서울: 태학사.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진현수. 2014. “해방 전후 소련의 대한정책.” 『현대사광장』 제4호.
- 코헨, 워렌 저·하세용, 이수진 역. 2003.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울: 문화디자인.
- Buzan, Barry and Ole Wæber. 2003.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lder, Kent and Min Ye. 2010.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 Victor. 2009/2010. “Power 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158-196.
- Cohen, Warren I. 2000. *East Asia at the Center: Four Thousand Years of Engagement with the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ummings, Bruce. 2014. “Japan as Number One (or Two): The American Preference for Japan in the East Asian Order, 1894-2014.”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최 국제회의. 『East Asia and Future Korea in the Gabo Year: 1894 and 2014』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10월 24일) 발표논문.
- Foot, Rosemary. 1995. *The Practice of Power: U.S. Relations with China since 19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nt, Michael H. and Steven I. Levine. 2005. “ReVolutionary Movements in Asia and the Cold War,” in Melvyn P. Leffler and David S. Painter (eds.). *Origins of the Cold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 George Kennan. The Charge in the Soviet Union (Kennan) to the Secretary

- of State, February 22, 1946. (<http://www2.gwu.edu/~nsarchiv/coldwar/documents/episode-1/kennan.htm>)
- Guthrie-Shimizu, Sayuri. 2010.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in Arne Odd Westad (ed.).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ger, Sheila Miyoshi. 2013.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New York: Norton.
- Kim, Stephen Jinwoo. 2001. *Master of Manipulation: Syngman Rhee an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1953-196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Niu Jun. 2010. "The Bir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oad to the Korean War," in Arne Odd Westad (ed.).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ller, Michael. 1985.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ueck, William. 2002. "The Coming of the Cold War to Korea," in William Stueck (ed.).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athersby, Kathryn. 2014. "Central European Security and the Decision to Prolonging the Korean War: Evidence from Russian and Romanian Archives," Paper presented at *Korea and Central Europe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 a conference organized by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and Eurasi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ovember 1.
- Westad, Odd Arne. 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Restless Empire: China and the World since 1750*. New York: Basic Books.

필자 소개

마상윤 Ma, Sang-Yoon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옥스퍼드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논저 「미중관계와 한반도: 1970년대 이후의 역사적 흐름」, 「적(敵)에서 암묵적 동맹으로: 데탕트 초기 미국의 중국 접근」,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과와 국회의 역할」.

이메일 sangyoonma@catholic.ac.kr